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3-22호 | 2023년 7월 14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대한민국 '신중년' 공감 정책 - ①경제적 웰빙 : 자산 유동성은 높여주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은 낮춰주고, 사회안전망은 미리 준비

고 승 연 연구위원(사회복지학 박사)

《 요 약 》

■ 신중년의 경제적 웰빙 현황

- 실속없는 50대 부동산 부자, 60대 이상 절반은 여전히 채무자의 삶: 50대 순자산액 535백만 원으로 최고, 하지만 72%는 부채 보유, 금융부채만 평균 1억원 이상
- 빈곤층과 부유층간 소득차 10배, 믿는 건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뿐: '17년에 비해 '21년 소득차가 크게 호전되었으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차 심화는 여전, OECD 최고의 빈곤율
- 경제적으로 지금은 불안하지만 미래는 개선을 기대, 하지만 노후생활비 마련은 막막: 50대 이후 경제 상황에 비해 절반 이상이 비관적, 50대의 30%, 60대 이상의 64.2%는 처분가능소득이 노후 생활비 이하
- 퇴직 후 일자리는 '단순노무직서비스판매직'과 '무직' 중 양자택일 쓸모없어진 학력경력: 대졸 신중년의 고용률 주요국에 비해 낮고 26%는 비경제활동상태, 학력·경력에 상관없이 저임금·저숙련 직종으로 쏠림 때문
- 신중년 일자리 질, '파트타임'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더 문제: 50대 이후 종사상지위 하락(임시일용직 50대의 25%, 60대 이상 55%), 60대 이상 일자리는 근무환경, 교육훈련 기회 등의 근로여건 추락
- 자영업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 창업 후 1년 이내 최소 3명 중 1명은 폐업: 자영업자들로 유지되는 50대 이상 고용률, 창업초기 생존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저조, 재취업 대안으로 준비 없는 창업이 문제인 듯

■ 신중년의 경제적 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부동산으로 부풀려진 자산과 줄지 않는 금융부채는 노후 경제적 웰빙의 최대 걸림돌, (거시적으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 정책 강화, (미시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적극 유도
- 경제적 웰빙을 위해 재무 불안정성 개선이 급선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 위험이 있는 대상을 조기 파악, 전수 대상 '예방적 자산모니터링' 의무 실시
- 빈곤층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핵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을 분리하여 신중년 전체로 대상 확대 추진, 공익형 사업은 참여자 수 및 참여수당 ↑
- 학력·경력이 무시되는 신중년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재취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필요,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 의무화 및 '신중년경력전문자격증제' 도입 추진
- 경력형 재취업 및 취창업병행 지원 등 신중년 일자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신중년일자리개발원' 설립 추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5060 생계형 영업자 지원창구' 설치·운영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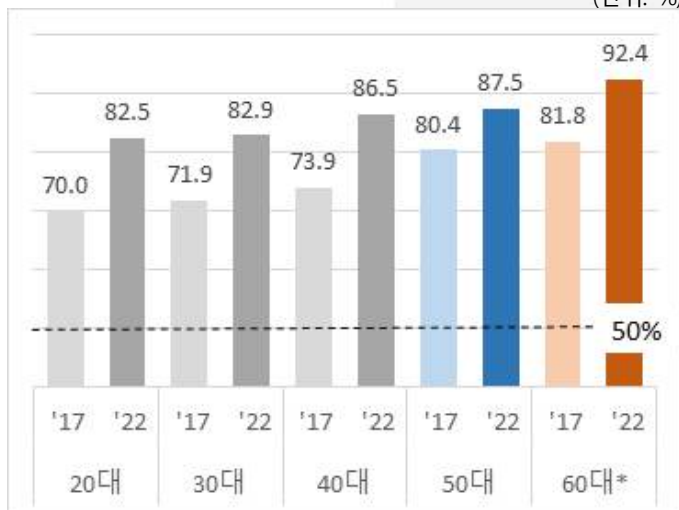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대한민국 신중년 공감 정책' 시리즈를 시작하며

- 전체 인구의 30% 차지하는 신중년, 자녀인 MZ세대와 부모인 노인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정책의 직·간접적 구심점
 - '22년 인구비중은 50대 16.7%, 60대 14.4%¹⁾, 퇴직 전후 경제적·사회적·주관적 삶의 급격한 변화 경험
 - 더욱이 5060세대 삶은 자녀세대의 취업·결혼·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부모인 노인세대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
- 신중년 세대의 정책 목표는 '국민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시에 개인의 행복한 삶의 영위'
 - '국민으로서의 만족감(자긍심)'은 전 세대가 50%이상으로 높고 지난 5년간 모두 10%p이상 상승, 그 중 5060세대가 최고
 - 개인의 행복도를 가늠하는 '주관적 만족도'도 '17년에 비해 크게 상승, 하지만 '만족한다'는 의견이 50% 이하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아져 60대가 최저 수준
 - 코로나19의 시련 속에서도 국민들의 자긍심과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지난 정권의 민생 정책 성공을 의미
 - 정책 과제는 '개인'의 삶과 '국민'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균형감 있게 유지·향상시키는 것
- 이에 본 고는 '개인' 및 '국민'으로서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첫번째 정책 제안으로, 자산·부채, 소득, 일자리, 창업 분야의 현황 분석을 통해 경제적 웰빙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사회 공정성, 소통과 갈등, 사회자본 등과 관련된 사회적 웰빙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후속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만족감(자긍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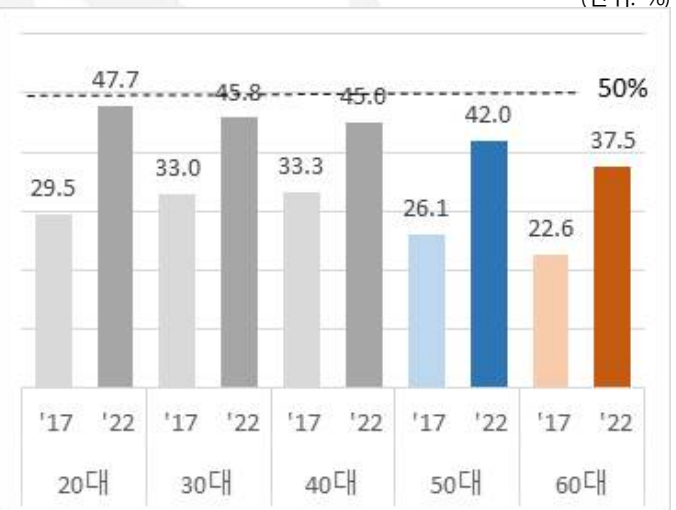
(단위: %)



주1: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에 동의한다는 의견(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 합
 주2: '22년 60~69세는 '60세 이상'의 응답임
 자료: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

(단위: %)



주: 4점 척도 중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 응답 합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1)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I. 신중년의 경제적 웰빙 현황

(1) 실속없는 50대 부동산 부자, 60대 이상 절반은 여전히 채무자의 삶

- 부동산값 상승으로 '21년 전 세대의 순자산액 급증, 50대 순자산액이 535백만 원으로 최고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 하지만 자산의 83% 이상이 부동산으로 현금유동성 악화 위기
 - 50대 이상의 순자산액 및 순자산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50대 이상에서도 83% 이상을 유지,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데 부동산 비중이 높아 재무적 불안정성 악화 가능, 경제적 웰빙에 부정적
- 50대의 71.9%, 60대 이상 46.5%가 부채 보유, 50대는 총 부채 중 금융부채가 74.5%로 평균 1억 원 이상
 - '18년 이후 전 세대의 부채액 증가 추세, 부채보유 비율이나 총부채 중 금융부채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
 - 60대 이상의 부채보유 상황은 50대 보다 개선, 그럼에도 금융부채 비중이 61.3%('22년)로 평균 금융부채액은 8천만 원에 육박
 - 50대 이후 미래 소득 감소가 예상됨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자산 상황은 노후 경제적 웰빙에 악영향, 연령 증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도 주목해야
 - 세대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중('21년)이 20대 2%, 30대 1.5%, 40대 2.8%, 50대 4.1%, 60대 5.9%로 연령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²⁾

< 가구별 평균 순자산액 >

(단위: 백만 원, %)

		'18	'19	'20	'21	'22
20대 이하	순자산액	73 (-2.7)	78 (6.8)	72 (-7.7)	86 (19.4)	85 (-1.2)
	비금융자산 비중(%)	64.0	71.7	74.4	81.8	83.8
30대	순자산액	234 (6.8)	237 (1.3)	254 (7.2)	288 (13.4)	299 (3.8)
	비금융자산 비중(%)	66.2	72.2	74.3	81.8	83.6
40대	순자산액	347 (11.2)	363 (4.6)	374 (3.0)	432 (15.5)	469 (8.6)
	비금융자산 비중(%)	67.2	72.4	74.4	81.2	83.6
50대	순자산액	396 (7.0)	400 (1.0)	410 (2.5)	467 (13.9)	535 (14.6)
	비금융자산 비중(%)	66.8	74.0	75.1	81.6	83.0
60대 이상	순자산액	364 (7.7)	368 (1.1)	374 (1.6)	432 (15.5)	483 (11.8)
	비금융자산 비중(%)	68.1	76.0	76.2	82.2	83.7

주1: ()는 전년대비증감률

주2: 비금융자산 비중은 총자산 중 비중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가구별 부채 현황 >

(단위: %, 백만 원)

		'18	'19	'20	'21	'22
20대 이하	부채 보유 (%)	50.8	57.0	59.2	56.1	60.4
	금융부채액 (%)	46.7 (2.3)	54.1 (15.7)	54.0 (-0.1)	60.2 (11.5)	75.8 (25.7)
30대	부채 보유 (%)	75.2	75.3	77.8	78.8	76.5
	금융부채액 (%)	90.1 (14.1)	97.5 (8.1)	105.9 (8.7)	119.4 (12.7)	124.4 (4.2)
40대	부채 보유 (%)	76.0	76.0	77.2	76.6	76.5
	금융부채액 (%)	101.0 (12.4)	108.5 (7.4)	115.1 (6.1)	120.8 (5.0)	126.8 (5.0)
50대	부채 보유 (%)	70.3	71.8	72.9	72.8	71.9
	금융부채액 (%)	92.9 (7.6)	97.0 (4.5)	101.8 (4.9)	105.0 (3.2)	111.6 (6.2)
60대 이상	부채 보유 (%)	48.4	47.7	46.7	46.4	46.5
	금융부채액 (%)	64.8 (4.5)	64.4 (-0.6)	67.9 (5.4)	77.3 (13.9)	79.7 (3.0)

주: ()는 전년대비증감률

자료: 좌동

2) '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2) 빈곤층과 부유층간 소득차 10배, 믿는 건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뿐

- 신중년의 소득5분위배율이 '17년에 비해 크게 호전, 하지만 여전히 빈곤층과 부유층간 10배 이상의 소득 차이
 -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이 50대는 11.9배('17년)→10.7배('21년), 60대는 12.6배→10.4배로 크게 개선, 소득1분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가 견인
 - '17년 대비 '21년 소득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소득1분위- 50대(28.9%), 60대 이상(37.0%), 소득5분위 - 50대(7.4%), 60대 이상(11.6%)
 - 소득원천별로 보면, 사업 및 재산소득 비중은 대체로 감소 추세인 반면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증가,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의 증가가 빈부 격차 완화에 긍정적 영향

< 소득원천별 비중 >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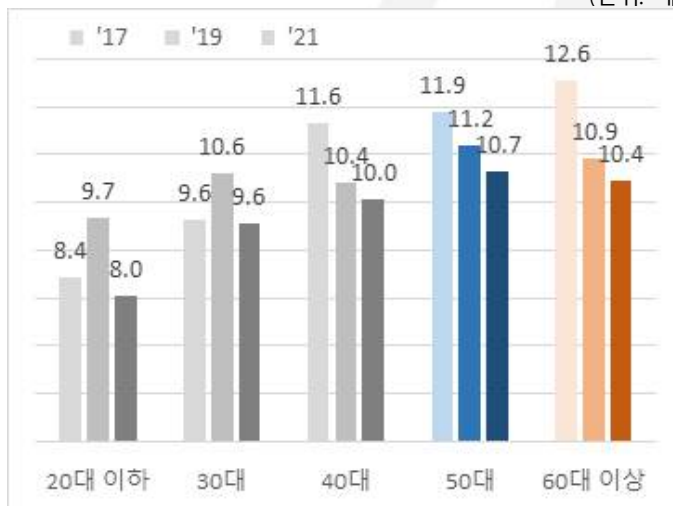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	연도	경상소득 금액 (만 원)	소득원천별 비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50대	'17	4,456	67.0	24.5	5.7	2.2	0.6
	'19	4,828	70.6	20.2	6.0	2.5	0.7
	'21	5,067	70.1	19.2	5.7	4.4	0.7
60대 이상	'17	2,274	40.8	20.4	14.2	20.0	4.7
	'19	2,449	42.2	18.3	13.2	21.7	4.7
	'21	2,720	41.9	18.8	12.9	22.4	4.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빈부 소득차뿐만 아니라 빈곤율도 심각, 연령이 많아질수록 상대적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 소득기반 개선 없이는 초고령사회 도래 시 '빈부 격차와 빈곤' 가속화

< 소득5분위배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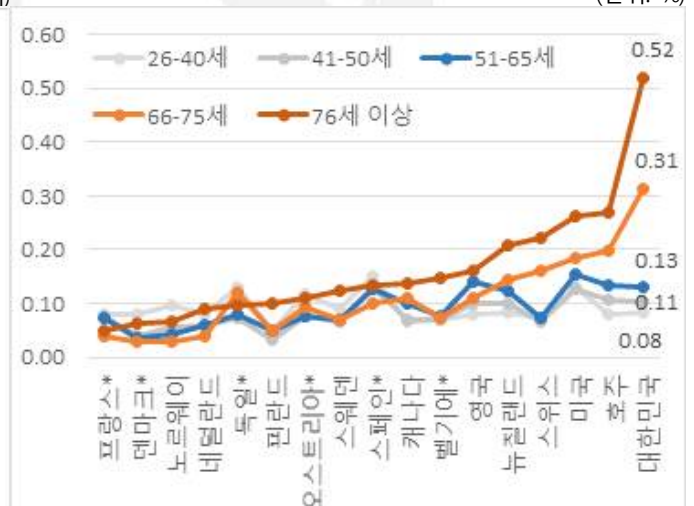
(단위: 배)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상대적 빈곤율 >

(단위: %)



주1: 중위 5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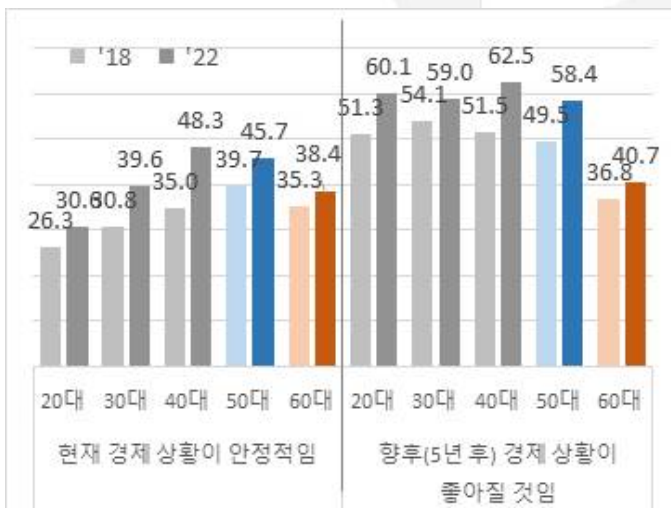
주2: *표시 국가는 '19년 기준, 그 외는 '20년 기준

자료: OECD

(3) 경제적으로 지금은 불안하지만 미래는 개선을 기대, 하지만 노후생활비 마련은 막막

- 대체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5년 전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현재보다 미래를 낙관, 60대 이상도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절반 이상은 현재와 미래 모두 비관적으로 인식
 -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전 세대 모두 50% 미만, 반면 미래에 대한 인식은 60대를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긍정적
 - 60대의 경우엔 현재와 미래 인식 모두 매우 비관적(현재 안정적 38.4%, 미래 낙관적 40.7%)
- 하지만 현실은 50대의 29.8%, 60대 이상의 64.2%의 처분가능소득이 적정 노후 생활비 이하
 - 지난 5년 동안 은퇴 가구의 생활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 하지만 은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7.2%가 여전히 생활비 부족 상황, 월 평균 62만 원에 불과한 국민연금수급액도 큰 도움이 못 돼³⁾
 - 은퇴 가구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17년 62.3%에서 ‘22년 57.2%로 호전, ‘여유있다’는 의견도 ‘17년 8.0%에서 ‘22년 10.3%로 증가(「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공단)
 -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256만 원) 기준으로 보면, 50대의 30%는 노인세대 진입 전에 이미 생활비 부족 상황으로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
 - 60대 이상 중 이전소득 없이 생계가 불가한 소득1분위가 전체의 40.2%, 장기적인 노후 소득기반 마련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을 위해서도 중요

< 현재 및 향후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
(단위: %)



주: 10점 척도 중, (현재)‘안정적이다’(0~5점), (향후)‘좋아질 것이다’(6~10점)의 응답자 비율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공단

< 처분가능소득(‘21년, 월 기준) >
(단위: 만 원, %)

	50대	인구비중	60대 이상	인구비중
소득1분위	93.2	12.8	98.3	40.2
소득2분위	217.5	17.0	222.6	24.0
소득3분위	350.2	19.0	361.8	16.6
소득4분위	536.0	22.1	540.9	10.7
소득5분위	993.3	29.1	1025.9	8.6

주: 가구주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필요한 노후생활비 수준(‘21년, 월 기준) >
(단위: 만 원)

		60대 이상
최소 노후생활비	부부기준	183.8
	개인기준	114.1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기준	255.6
	개인기준	163.2

주: 특별한 질병없는 건강한 노년을 전제로 한 생활비
자료: 좌동

3) '23년 1월. 국민연금공단

(4) 퇴직 후 일자리는 '단순노무직·서비스판매직'과 '무직' 중 양자택일, 쓸모없어진 학력·경력

○ 유럽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학력 증가에 따른 고용률 증가 미미, 대졸 이상 55~64세 4명 중 1명(25.9%)은 비경제활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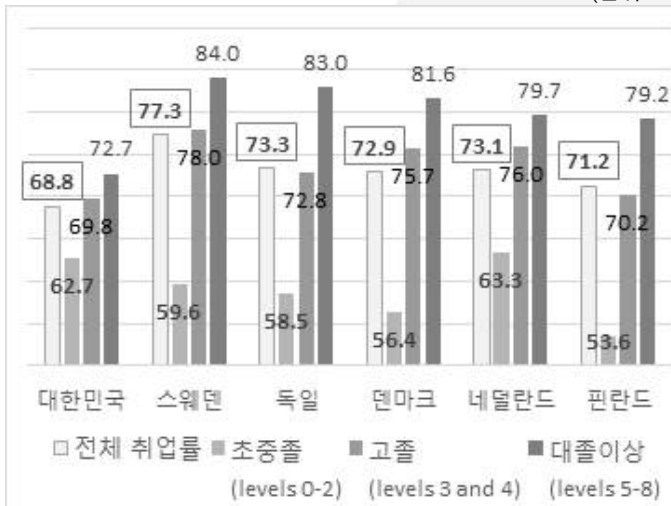
- 우리나라 신중년 고용률(68.8%)이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부진, 스웨덴(77.3%)과 8%p이상 차이
- 특히 우리나라 대졸 이상 55~64세 고용률은 72.7%로 스웨덴(84.0%)과 11.3%p 차이, 이밖에도 독일(83%), 네덜란드(79.7%), 핀란드(79.2%)과도 고용률 차이 大
- 주요 국가들은 고용률에 대한 학력의 긍정적 영향 뚜렷, 우리나라는 고졸과 대졸 이상의 고용률 차이가 2.9%p에 불과(독일 10.2%p), 실업 상태의 대졸 이상 신중년이 다수임을 의미

○ 고학력 신중년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단순노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직종 쏠림이 심하기 때문, 학력·경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

- 임금근로자 중에서 단순노무직 또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50대 21.1%, 60대 이상은 29.9%, '장치 기계조작/조립 종사자'를 포함하면 27.4%(50대), 38%(60대 이상)로 저임금·저숙련 직종 종사자 비중 大
- 연령 증가에 따라 '상용직의 관리자 또는 전문가/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가 저임금·저숙련의 '임시·일용직의 단순노무종사자'로 전환, 이후 노동시장 이탈시까지 일자리 질 회복 거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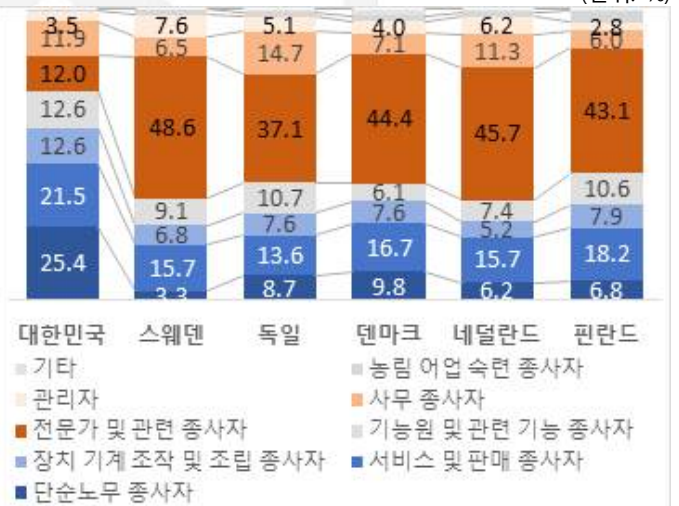
< 55~64세 학력별 고용률('22년) >

(단위: %)



< 55~64세 직종별 임금근로자 비중('22년) >

(단위: %)



자료: EUROstat, 「경제활동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주: 좌동
자료: 좌동

(5) 신중년 일자리 질, '파트타임'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더 문제

- 연령증가에 따라 근로여건 만족도 하락, 특히 은퇴 후 일자리 질의 급격한 하락으로 50대와 60대간 근로 만족도 차이 뚜렷
 - '17년에 비해 근로여건 만족도가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60대의 경우 '인간관계', '하는 일', '인사관리'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
 - 은퇴 후 일자리 질의 급격한 하락으로 60대와 50대의 만족도에 큰 차이, 특히 만족도의 낙폭이 큰 영역은 '직장 내 폭력방지 노력', '교육훈련 기회', '근무환경'
 - 과거에 비해 학력 및 소득 향상 등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영향
- 연령증가에 따른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종사상지위 변화가 일자리 질에 영향, 하지만 종사상지위의 변화보다 '신중년'의 일자리 자체도 문제
 - 임시·일용직 비중이 연령 증가에 따라 17.1%(40대)→25.3%(50대)→54.8%(60대)로 증가, 종사상지위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질도 자연 하락
 -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신중년 중 파트타임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것은 종사상지위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중년'의 일자리 질이 더 취약함을 암시

< 임금근로자 중 파트타임 비중('22년, 55~64세) >

(단위: %)

	네덜란드	독일	대한민국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임금근로자 중 파트타임 비중	34.9	23.8	18.7	15.0	11.8	8.1
고용률	73.1	73.3	68.8	71.2	72.9	77.3

주: 주 30시간 미만

자료: 고용률은 OECD, 파트타임 비중은 EUROstat 및 「경제활동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근로여건 만족도('만족한다') >

(단위: %)



주: 10점 척도 중 '만족한다'(6~10점)의 응답자 비율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6) 자영업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 창업 후 1년 이내 최소 3명 중 1명은 폐업

○ 50대 이상이 전체 소상공인의 절반(50.9%)을 차지, 자영업자들로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셈

- 소상공인 중 50대가 30.8%, 60대 이상은 20.1%, 50대 이후 제조업·부동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도매/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생계형 과밀 업종에 집중
- 스웨덴은 고용률이 우리나라보다 8.5%p 이상 높지만 자영업자 비중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10.6%), 임금근로자 중 파트타임 비중은 8.1%에 불과
- 덴마크, 핀란드 등 일자리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임금근로자들이 고용률의 핵심이라는 점

○ 문제는 50대 이상의 창업 성공확률이 타 연령대보다 낮고, 특히 창업 초기의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것, 또한 악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과 재무 상황도 심각

- 경험·지식·자본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50대 이상 창업자의 1년 생존율 저조
- 더욱이 자영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소득은 감소 추세, 임시·일용직이나 무직보다 평균 금융부채 多, 대출 연체율은 높아 가는데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예정
- 자영업자 평균 연소득: '17년 2170만원 → '21년 1952만원⁴⁾(소득 20%이하 '21년 84.1만원)
-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자영업자(1억4903만원), 임시·일용직(5629만원), 무직 등 기타(8198만원)⁵⁾

< 산업별 · 대표자 연령별 소상공인 현황('21년) >

(단위: %)

	연령별 비중	산업별 비중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개인 서비스업
30대	16.0	7.2	6.4	37.0	20.0	2.2	1.9	3.5	3.1	7.1	3.0	8.7
40대	27.9	10.3	11.2	32.8	15.5	2.5	3.1	3.4	3.0	6.5	2.4	9.2
50대	30.8	14.4	13.7	30.3	17.4	1.5	4.8	2.1	2.6	3.1	2.5	7.7
60대 이상	20.1	15.0	11.1	33.0	18.9	0.9	6.7	1.5	2.2	1.0	2.3	7.5

자료: 「소상공인실태조사」 통계청

< 55~64세 종사상지위('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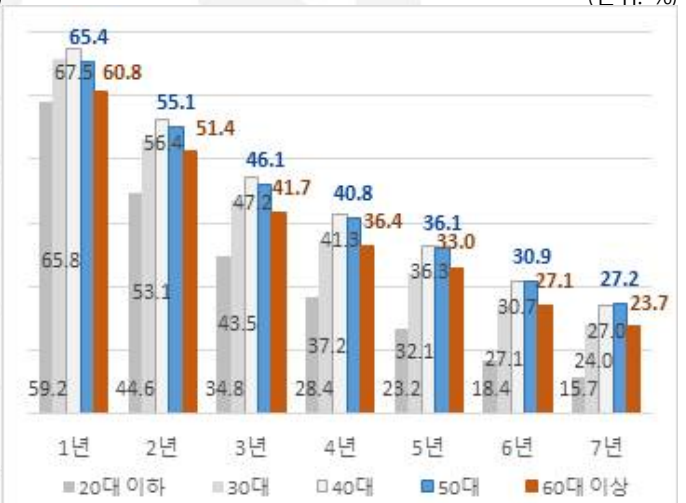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UROstat, 「경제활동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신생기업 생존율('20년) >

(단위: %)



자료: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4)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3. 6. 6)

5)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II. 신중년의 경제적 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부동산으로 부풀려진 자산과 줄지 않는 금융부채는 노후 경제적 웰빙의 최대 걸림돌, 거시적으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정책 강화 시급, 미시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적극 유도
 -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와 금리 인상 억제 등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신중년에게도 달콤한 독약,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정책 강화 시급
 - 주택연금은 부동산 보유 빈곤층을 위한 최적의 탈출구, 주택연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 주택연금 가입조건 지속적인 현실화(완화) 추진,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⁶⁾ 활성화도 고려
 - ‘22년 주택연금 신규가입건수(1만4600건) 전년대비 35% 증가, 실제 가입연령도 낮아지는 추세(’08년 74.3세 → ’22년 72세), 주택연금의 평균 월 수령액 116만 원, ’20년 가입연령 60세→55세
 - ’23. 6. 21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연금 대상 공시가 9억원 이상 현실화 가능
- 경직된 자산 구조와 많은 금융부채로 인한 재무 불안정성 개선이 급선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 위험이 있는 대상을 조기에 파악하여 ‘예방적 자산모니터링’ 의무 실시
 - 5060세대는 소득감소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기, 예방적 차원에서의 자산과 부채 관리 필요
 -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은 금융에 국한된 교육 형태로, 개인별 종합적인 자산(부채)관리 상담으로 접근 필요
 - 정기적인 국가건강검진으로 중대 질병을 예방하듯이 만50세와 만60세 도래 시 빈곤층화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사전에 파악, 예방적 자산모니터링(분석 및 진단) 의무 실시
- 빈곤층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핵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시장형·사회서비스형을 분리하여 신중년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질적 확대 추진
 -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하고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고려, 기존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분리하여 양과 질을 확충하고 신중년 전체로 확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추진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인원 확대 및 참여수당 증액(월27만원→월3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 기반 강화⁷⁾
 - ’23년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전년대비 6.1만개 축소(60.8만 명→ 54.7만 명)

6)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을 빌려 집을 살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연금전환 시점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다가 전환 시점이 되면 빚을 일시에 상환한 뒤 남은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7) 노인 일자리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20년 발의된 3건(진성준, 남인순, 인재근 등)의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 해당 법률안들은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을 체계화하고 법제화하자는 의도임. 하지만 법제화보다 변화되고 있는 노인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간 일자리 사업의 재편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력·경력이 무시되는 신중년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재취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필요,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 의무화 및 ‘신중년경력전문자격증제’ 도입 추진**

- '16년부터 60세 정년이 도입되었으나 '07년 이후 평균이직연령은 여전히 49세,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기존 법·제도의 강화가 먼저
 -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07.5.-49.6세, '10.5.-49.3세, '15.5.-49세 '20.5.-49.4세, '22.5.-49.3세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현재 산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⁸⁾ 적용은 ‘권장’ 수준, 기준고용률 이행률이 증가 추세이나 ‘22년 대상 기업의 18.3%가 기준고용률 미달 상황⁹⁾, 기준고용률 적용 ‘의무화’로 법 개정 추진 필요
-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신중년 경력자를 위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되, 재취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필요
- 관련하여 민간 노동시장을 통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직무역량을 등급화한 ‘신중년경력전문자격증제’를 도입¹⁰⁾하고 등급별 임금·근로조건·교육훈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활용 추진(신중년경력등급제에 의해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 참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년 이상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퇴직전문인력 3000명을 대상('23년 257억원 예산)으로 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참여자 중 35~54세가 30.1% 차지)

○ **경력형 재취업 및 취·창업병행 지원 등 신중년 일자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신중년일자리개발원’ 설립 추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5060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창구’ 설치·운영도 고려**

- 연령이나 추진 주체(중앙정부/지자체, 복지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라 분절된 신중년 일자리 정책을 ‘신중년일자리개발원’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체계화
- 질 낮은 일자리보다 신중년의 경력·경험을 활용한 창직형 창업이 더 긍정적, 취업 및 창업 병행 지원체계를 갖추고 밀착 상담과 지원 강화
- 위험수위에 있는 50대 이상 생계형 자영업자의 빈곤층화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 ‘5060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재취업 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극적 연계 등 사회안전망 통합 및 확충

8) 고령자(55세 이상) 기준고용률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산업에 따라 2~6%로 차등 적용, 전년도 의 고령자 고용현황 작성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9) 「고령자고용현황」 고용노동부

10) 고승연 (2022. 8), 중고령층을 위한 ‘보편 타당한’ 일자리 정책 제안, 민주연구원

참고문헌

- 고승연 (2022. 8), 중고령층을 위한 '보편 타당한' 일자리 정책 제안, 민주연구원.
- 고용노동부 (2022. 12. 28). 5060 퇴직자에게 3000개 경력형 일자리 지원.
- 고용노동부 (2022. 1. 2.). 2023년 일자리 예산 30.3조원,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편성.
- 관계부처합동 (2023. 1. 27.).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 관계부처합동 (2023. 1. 30.).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2. 12. 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관계부처합동 (2022. 8. 25).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 금융위원회 (2022. 12.).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안.
- 기획재정부 (2022. 12. 1.).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 보건복지부 (2022. 8. 30).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올해 대비 11.8% 증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 12. 30).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시행 공고.
- 이성희 (2023.04.04.). "재기 돕는다"...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경향신문.
- 정윤영 (2023-06-05). "되살아난 주택연금의 인기, 지속 가능할까."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13권12호.
- 중소벤처기업부 (2022. 12. 29).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